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김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 486
----------	--------

제출년월일 : 2024. 6. 26.

발 의 자 : 김진숙, 박은경, 유재수,
현옥순, 김유숙, 김재국,
이지화, 선현우, 이해경,
이대구, 한명훈, 박태순,
박은정 의원(13인)

1. 주 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는 수사사실 통보 범위가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지탄의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 성범죄 등 소속 임직원의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 출자·출연기관이 그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비위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조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며 건의함.

2. 제안이유

-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제정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2024년 3월 기준, 총 843개 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의 발생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은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중대 비위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 처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는 수사기관의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사실 통보 범위가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음.
- 이에, 사회적 지탄이 되는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 출자·출연기관이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제21대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안이 2건 발의되었으나 자동 폐기 되었으며, 제22대 국회에서는 관련 개정 법률안이 1건도 발의되지 않은 상황으로 해당 법률 개정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합리적인 인사관리 및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과 적극적인 의지로 법률 개정을 촉구함.

3. 참고사항

- 송부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란 주민의 경제, 문화, 체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정책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법인으로, 2024년 기준 전국 출자·출연기관은 843개의 기관이 있다.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은 이러한 사회기반시설 관리 및 주민 서비스 제공 등 그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이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뇌물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음주운전 비위행위뿐만 아니라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출자출연법」 제34조의2에 수사기관의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에게 대한 수사사실 통보 범위가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 성 관련 중

대 비위행위 등은 수사사실 통보에 있어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출자·출연기관의 합리적인 인사관리 및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직무외 수사사실 통보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방출자출연법」의 음주운전, 성 관련 중대 비위행위 등 직무외 수사사실 통보 개정을 위해 2건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자동 폐기되었고,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는 관련 개정법률안이 아직 1건도 접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지방출자출연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음주운전, 성 관련 중대 비위행위 등에 대한 수사사실 통보 시스템 구축을 강구하라!

하나. 국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4. 6. 28.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